KFA 비료와 식량 2026년 2월호

Fertilizer & Food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방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6. 이달의 주요 인사
7. 회원사 제품 소개
8. 2026 농업전망 주요 내용(요약 발췌)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 가성비 좋고, 안전하며, 효과적입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3 FAX : 02-552-2814
남해화학㈜ · ㈜조비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 KG케미칼㈜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복지관, 즐거운 설명절 행사 후원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12일 10시 「복(福)이 말(馬) 달려오는 즐거운 설명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문화행사로 마련되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장 구민호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송하진 의원,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 정명숙 미평동장, 주택관리공단 박민수 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여수사업장 선성규 부장, 금호석유화학(주) 여수공장 김담희 부장, 향토예술인총연합회 이청 회장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25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황명숙 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주민 여러분께 명절의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과 나눔 활동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여수사업장, 금호미쓰이화학(주) 여수공장, 금호폴리켐(주) 여수공장, **남해화학(주) 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주) 여수공장, ㈜삼양종합유통, 주택관리공단 여수 미평 1관리소,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등과 같은 지역사회 여러 기업의 후원을 통해 진행됐다.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복지관의 문턱은 낮추고, 나눔의 온도는 높이는 복지실천을 통해 주민의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밀착형 복지관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여수넷통뉴스(2026.2.13.) 기사내용 인용

❑ ㈜풍농

○ 숨은 비결! 유황, 칼슘, 마그네슘 다량함유 기능성비료

– 명품 유황칼슘플러스(유기농업자재)

명품유황칼슘플러스
유기농업자재(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황 22~23%, 칼슘 20~22%,
마그네슘 13~15%

주식회사 풍농은 유황, 칼슘, 마그네슘 등 기능성 필수양분이 다량함유된 친환경 토양개량자재를 출시하여 원예, 과수 재배농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명품유황칼슘플러스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공시-2-3-886호)로 유황 22~23%, 칼슘 20~22%, 마그네슘 13~15%이 포함된 다량의 기능성 양분을 함유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비료로 고추, 감자, 배추, 마늘, 양파 및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원예·과수류 재배에 필요한 필수성분을 공급합니다.

흔히 토양개량용으로 사용되는 석회질비료(소석회, 부산석회, 석회고토 등)에서 부족했던 유황, 마그네슘을 다량 함유하여 광합성 능력향상, 작물 생육증진 및 농산물의 맛, 당도, 때깔,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유황, 칼슘, 마그네슘을 다량 필요로 하는 마늘, 양파의 생리장해 예방 및 병충해 저항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알카리분 40% 이상 함유로 토양개량능력이 뛰어나 매년 사용시 토양산도(pH) 적정화로 토양 활력유지와 작물생육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명품유황칼슘플러스는 유기농업 및 관행 재배농가 모두 사용 가능하며 정식 또는 파종전 밑거름 3포(300평당) 사용시 유황, 칼슘, 마그네슘이 다량 공급되며, 비료 사용 편리성 향상을 위해 입상형으로 제조되어 농가 시비 편리성 향상, 소비자 만족도를 한층 높인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친환경유기농자재입니다.

※ 풍농 자료 인용

❑ ㈜팜한농

○ 도심형팜 '창사원', '시니어라이프' 가치 높인다

팜한농(대표 김무용)이 지난 6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손창규)와 '도심형팜 사업 적용 및 확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동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시니어에 특화된 도심형팜 모델 개발을 목표로 협업할 계획이다.

팜한농은 도심형팜 '창사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 맞춤형 작물 재배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행동 패턴과 동선을 고려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계획이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IDEA를 모두 석권한 국내 1위 건축 설계 회사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건축 분야에서도 이른 바 시니어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편의성, 커뮤니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니어 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공간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팜한농은 국내 1위 그린바이오 기업으로서 쌓아온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민에게 창사원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천안 연암대학교 내에 오픈한 창사원 1호점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팜한농 관계자는 “시니어들이 도심형팜 ‘창사원’에서 작물을 직접 키우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신체 활동을 늘리고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니어에게 최적화된 ‘창사원’을 만들어 새로운 공간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농축유통신문(2026.2.12.) 기사내용 인용

❑ ㈜조비

○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에 교육물품 기증

㈜조비가 인도네시아 머라우케 지역에 위치한 꾸꾸밋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물품을 기증했다.

조비 이승연 대표이사와 공병선 PT.BIA 법인장, 이성수 포스코인터내셔널 산업소재사업실장 등은 최근 인도네시아 머라우케 지역에 위치한 꾸꾸밋 초등학교를 방문해 필기구를 비롯한 학용품부터 체육용품 등 학생들의 교육 활동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연 조비 대표이사는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기술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비는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비료 공급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농업 환경에 적합한 생분해 코팅 기술이 적용된 완효성 비료를 수출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현지 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6.2.20.) 기사내용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상임위원회 개최(2.6, 협회)

○ 2026년도 사업추진 계획 사전 의견 수렴 등

❑ 2026년도 원료구입자금 사업심사위원회 개최(2.12, 협회)

○ **협회 공고(제2026-1호)에 근거, 농식품부, 농협은행, 외부전문가 심사**

○ **원료구입자금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종합검토, 배정액 결정(농식품부 장관 승인)**

– 2026년도 원료구입자금 1,800억원을 9개 항목을 평가하여 업체별 배정

❑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대외협력 주요업무 추진

○ **(농식품부) 인산 감축에 대한 의견 제출(2.19)**

– 농식품부의 가축분 퇴비를 사용한 인산대체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등 포함 퇴비는 무기질비료 대체 불가능하며 기능과 역할 차이로 보완관계임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플라스틱 관리 간담회 참석, 의견 제시(2.24, 이룸센터)**

– 참석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장, 시민단체(5), 전문가(5), 협회(3)

– 내용 : 미세플라스틱 관리·보관·규제, 소비자 권리, 비의도적 사용 모니터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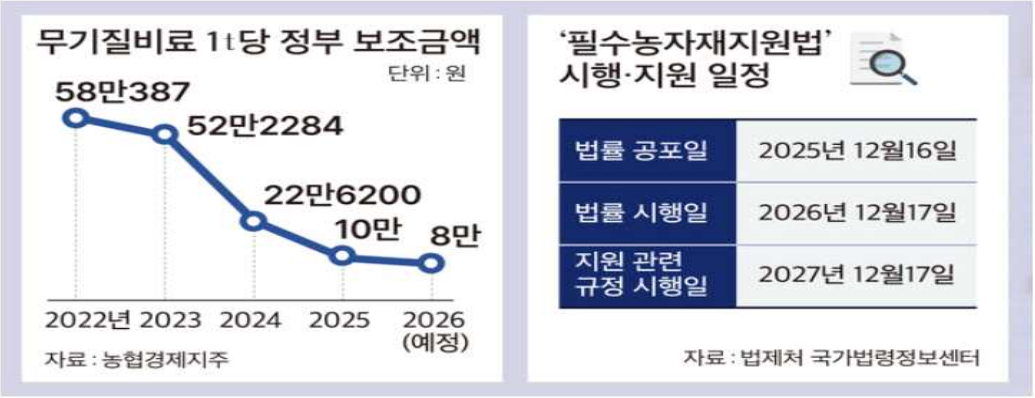
– 기후부 장관 : 미세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고 순환체계 구축, 인체 피해 최소화 등을 인식하는 회의로 평가

– 협회 박춘근 전무이사 : 완효성비료의 코팅물질은 환경부가 보는 미세플라스틱 다량 배출업종이 아니며, 고령화·토양환경보전·비료 시비절감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발언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보도 동향

❑ 필수농자재 지원 '2년 뒤에나'…무기질비료 인상 부담 어쩌나

- 지원법 규정 등 이유로 늦어져
- 비료값 뛰는데 정부지원 급감
- 내년 가격보조 예산 확보 시급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지원법)'에 따른 농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상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은 제정 당시 농가 영농비 부담 완화에 첨병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년간의 영농비 지원 공백을 절반이라도 메꾸기 위해선 정부가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일찌감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필수농자재지원법'은 2025년 12월16일 제정·공포됐다. 하지만 시행일은 1년 후인 2026년 12월17일로 명시돼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제7조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조항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에서 농업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하지만 법의 부칙은 '제7조부터 9조까지 등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하위 법령과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지원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농자재 가격 급등 조건이 충족돼야 사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구조인 만큼 법에 따른 농가 지원은 빨라야 2028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 지원이 2028년에야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선 농업현장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 가격이 2년 연속 오른 데 따른 영농 부담을 메꿀 수단이 없다는 데 걱정이 많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최근 무기질비료의 농민 판매 기준가격은 10일부로 평균 5.6% 인상됐다. 농약 계통공급가격은 1.8% 상승했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올 1월 기준 주요 국제 원자재값이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17% 상승한 데다 1월 평균 환율도 1461원으로 전년 동기(1454원)를 웃돌았다"면서 "비료업계는 당초 16% 안팎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률은 5.6%지만 올해 정부의 비료값 인상분 가격보조 지원사업 예산이 줄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체감하는 평균 인상률은 8.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병렬 풍농 이사는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비료공급 자문위원회'에서 "중국의 요소·인산이암모늄(DAP) 수출 규제로 베트남·오만·아랍에미리트(UAE)·모로코 등 대체 수입국을 발굴·활용 중이지만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며 "자체 내수 영업이익률이 2% 수준에 그쳐 이자비용을 겨우 감당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권 이사는 "연 3% 저리로 비료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 규모도 올해 2000억원으로 지난해(5000억원)보다 60% 줄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올해 무기질비료 1t당 지원될 정부 보조금은 8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58만387원)에 비해 86% 감소했다.

정태연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장은 “2024년부터 무기질비료 예산이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더욱이 올해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첫해인 만큼 정부는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꼭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은 무기질비료와 관련해 2022~2025년 모두 336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엔 완효성비료·우량비료 공급을 확대해 영농편익을 높이고 영농비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협과 협력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농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농민신문(2026.2.10.) 기사내용 인용

❑ 무기질비료 보조 구매가격 8.3% 인상... 농가 생산비 부담 ‘눈덩이’

– 제1차 비료공급 자문위원회

- 요소·DAP 등 원자재가 급등에 운송 운임 추가·환율 불안정
- 농업인 판매가 전년비 5.6%↑ 정부 보조 축소로 실제 더 올라
- 지역 농협·농업인 우려 커지고 업체 ‘고통분담’도 어려운 상황 “정부가 대안 마련해야” 촉구

올해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가격이 전년에 비해 5.6% 인상될 예정이다. 더욱이 정부 보조가 축소됨에 따라 보조 구매가격은 8.3% 인상돼 농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월 6일 2026년 제1차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비료사업 대내외 여건과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보고했다. 그 결과 올해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6%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톤당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은 87만1000원이 될 전망이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요인은=올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다만 인상폭을 두고선 업계와 농협의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와 업체들은 12월 상순부터 총 48회에 걸친 입찰 및 시담을 진행했다. 그만큼 인상폭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올해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다. 이유는 무기질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고, 여기에 환율 또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해가 갈수록 오르고 있다. 요소는 2024년 5월 톤당 288달러였지만, 2025년 1월 389달러에서 2026년 1월 443달러로 급등했다. 인산이암모늄(DAP) 가격 역시 같은 기간 513달러에서 620달러, 690달러로 상승했다. 상승 폭이 가장 큰 원자재는 염화칼륨으로 2025년 1월 274달러였던 것이 2026년 1월 358달러로 30.7%가 올랐다. 이에 원자재 평균 가격은 전년에 비해 17.0%가 상승했다.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 주원료인 요소, 인광석, 염화칼륨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중동, 중국, 모로코 등으로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요소 수입 물량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만여톤이었지만, 2024년 10월 이후부터 수입 물량은 2만여톤에 불과했다. 중국의 수출 물량 통제와 검역 강화로 원자재 수급난이 심화된 것이다. 이에 베트남,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 중이지만 물량 부족에 따른 교섭 약화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운임 추가 등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불안정한 환율도 문제다. 2024년 1월 원달러 환율은 1367원이었지만, 2025년 1월엔 1454원으로 급등했고, 올해 1월도 1461원으로 1400원 중반대에서 고착화된 상태다. 비료 가격은 환율에 약 58%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환율이 10% 오르면 비료 가격은 약 5.8%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 하는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입장에선 원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반응은=지역 농협과 농업인단체에선 당장 농업인들의 올해 생산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보였다. 매년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생산량이 증가하면 폭락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이 전년에 비해 약 100억원 가량 축소되면서, 보조 구매가격은 더 인상될 전망이다. 이로써 올해 무기질비료 보조 구매가격은 톤당 8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8.3% 오를 것으로 보인다.

허수종 전북 정읍 샘골농협 조합장은 “작년에도 비료업계가 어렵다고 해 고통분담을 말했는데, 지금 정세를 보면 업체에만 고통분담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농업 생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료인 만큼 정부에서 고민을 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료 가격 상승은 농민들의 생산비에 즉각 반영되는 부분이다. 농민은 생산비가 지속 오르고, 비료산업 전반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기댈 곳은 정부다”며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도 힘을 모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농민과 업계의 의견을 잘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비료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농협과 계통가격 입찰 당시에 비해 현재 원자재 가격이 더 크게 올라 제품 생산의 부담이 커지면서 적자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심석일 남해화학 비료사업본부장은 “올해 비료 가격 입찰 당시와 비교해 현재 원자재 가격이 갑작스럽게 폭등했는데 공급 가격엔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서 원가 부담

은 고스란히 업체들이 안게 된다"며 "이 난관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걱정이다"고 말했다. 권병렬 풍농 이사는 "비료업체 입장에선 탄소배출 허용량도 줄고 있어 친환경자재를 생산해야 하는데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며 "정부에서 원자재 공급망 확대나 수출과 관련된 정책 지원책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태섭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민이나 업계나)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정부라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업체의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재 내수 쪽 공급이 어렵다고 보면 생산 공정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지원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6.2.11.) 기사내용 인용

❑ 서천호 의원, 가축분뇨 액비살포 규제 해결법안 대표발의

– 문금주 의원 이어 추가발의... 여야 공감대
– 대한한돈협회 "적극적인 환영" 의사 밝혀
– 비료생산업 등록시, 액비 살포규제 전면 제외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5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되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협회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해서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환경부가 계속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해 오던 것을 비료관리법으로 관리주체를 넘기면서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인 ‘비료’로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이번 서천호 의원의 발의로 국회 내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협회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가축분뇨 자연순환 현장 애로사항 해소 ▲산성화된 국내 농경지 지력 증대 ▲**무기질비료 감축으로 인한** 막대한 탄소 저감 ▲자원화시설의 과도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한돈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시고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영농자재신문(2026.2.9.) 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국 내 】

1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발표 … 2030년까지 주요 취수원 수질 Ⅰ등급 달성 목표

- 녹조 원인물질인 총인 30% 감축으로 녹조의 근본적 해결기반 마련
- 낙동강 본류 유입 산업폐수 62% 초고도처리로 수질 안전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녹조, 원인물질부터 줄인다-총인 배출량 30% 감축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① 생활하수 및 도시 비점오염 관리 강화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5.12.31), 202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도 마련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또한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40% 이상)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인다. 또한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② 가축분뇨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두번째로, 가축분뇨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투입량을 초과하여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되어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하여,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하수도법에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시, 기존 펠릿형태 외 비성형도 허용하여 형태에 대한 제약 완화

또한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한다. 다른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검토한다.

③ 농경지 양분 관리 3단계 체계 구축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확대하고 토양 내 양분 함량을 고려한 비료처방과 적정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처방에 대한 시비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토양검정 : 작물 재배에 필요한 적정 비료량을 산출하기 위해 토양의 양분상태를 분석하는 것

또한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하여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이고,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한다.

* 완효성비료: 작물의 생육 기간에 맞추어 비료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비료

** BMPs(Best Management Practices):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비료·토양·수자원 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관리기법

앞선 2단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집약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 관계부처 협업 기반의 실행체계 구축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환경개선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지방정부 소통을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강화하여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비료 사용 처방 고도화, 지역별 양분 권장투입량 산출, 농축산 유래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농업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을 위한 마을 단위 지원조직 운영,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Ⅰ등급 수준(총인 0.04mg/L이하, 총유기탄소 4mg/L이하)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6.2.25.) 인용

2 올해 벼 재배면적 3만8000ha 줄인다

○ 정부, 전략작물 9만ha 계획

○ 백태 등 콩 직불금 대상 제한

정부가 올해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8000ha 줄어든 수준으로 관리하고, 전략작물 재배면적은 9만ha로 계획했다. 이와 함께 민관 협치를 중심으로 한 ‘식량산업 혁신전략’을 추진해 선제적인 수급조절과 구조 개편을 실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개최됐다. 해당 법은 양곡수급계획 범위를 기존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매년 논 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과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2026년 쌀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8000ha 줄어든 64만ha 내외로 전망했다. 또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9만ha로 계획했다. 품목별 목표 면적은 ▲두류 3만2000ha ▲가루쌀 8000ha ▲하계조사료 1만9000ha ▲옥수수 3000ha ▲깨 4000ha ▲수급조절용 벼 2만1000ha ▲율무·수수·알팔파 3000ha 등이다.

한편 전략작물 가운데 콩은 올해 수급안정을 위해 일부 세부 품목에 대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제한 규정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백태(메주콩)와 콩나물콩에 대한 직불금은 지난해 동일 품목을 재배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농업법인이 지난해 직불 이행 면적 내에서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앞서 일부 콩 생산자들은 지난해 파종기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불가피하게 백태에서 서리태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들이 올해 백태를 재배할 수 있게끔 이같은 제한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 기존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 농민신문(2026.2.21.) 기사내용 인용

3 "농업 정책자금 통폐합·일몰제 도입"... 지출구조 개편 추진

○ 기획처, '재정구조 혁신 TF' 점검회의

○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국립시설 운영 효율화 등 논의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지출을 구조조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액의 다수 농업 정책자금은 단순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 대해선 일몰제를 도입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선 농업정책자금 개편과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국립시설 건립·운영 효율화, 우체국 시설 재정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농업정책자금은 지원 방식과 관리·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농민 대상 자금 지원 역할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소액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 자금을 목적과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해 통폐합**한다. 자금이 효율적·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핵심 분야별로 목표에 따른 공급 규모를 산정하고, 필요한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자금의 공급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 신규 자금 가운데 **성과가 미흡하다면 일몰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관해선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과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이 테이블에 올랐다. 단기 근속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고용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동계·기업·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국립시설의 건립·운용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TF는 이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선정 기준과 우선 순위,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를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국립해양문화시설은 신규 시설 설립 때 사전타당성 검토와 국비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은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을 강구하도록 했다.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도 전면 재정비 한다. 우편 물량 감소, 디지털 전환 요구 등 변화상에 따른 조치다. 노후 우체국을 신·증축할 때 이격거리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 투자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우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접목한 'AX(AI 전환) 디지털 데스크'도 구축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 여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2026.2.13.) 기사내용 인용

4 쌀값부터 농지제도까지... 새 정부 농정 현안에 '질문쇄도'

○ 장수 한국농업연수원서 1박2일

○ '한농연 핵심지도자 혁신교육' 200여명 참석 열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장수 한국농업연수원에서 '2026년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핵심지도자 혁신교육' 행사를 진행했다. 한농연 소속 광역·시군연합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올해 업무계획과 농지제도·사업을 각각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며 새 정부의 농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6·3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농정 현안

“밥 한 공기 284원, 비싸단 건 맞지 않아”

‘쌀값 급등’ 프레임 몰고가는 일부 언론·정치권 거센 비판

생산량 줄어 가격 오른 과일 수입 확대는 ‘엉뚱한 처방’ 지적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큰 부담’, 필수농자재 지원 부족 등 성토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 질의가 쇄도하는 등 새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지 쌀값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쌀값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이를 ‘쌀값 급등’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심천택 청송군연합회장은 “밥 한 공기가 284원이고 국민 1명당 하루에 1.5공기를 먹는다고 보면 쌀값은 하루에 420원 수준이다. 커피 한 잔 5000원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쌀값이 지나치게 하락했다가 조금 오른 것을 두고 비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일 가격 역시 마찬가지다.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사실은 외면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사과 수입 확대나 할당관세 적용 등 수입 과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한 **김재형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은 "쌀값은 수년간 하락한 상황에서 최근 올라온 것으로, 증가율만 보면 일반 공산품보다 낮다는 점을 송미령 장관도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쌀값 가격이 과도하게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한 관심과 달리 생산 현장을 압박하는 생산비 부담 완화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 회장은 "농협공판장 등 도매시장의 법정 위탁수수료 7%인데, 생산비 급등 상황에서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으로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에서 농협공판장이나 도매법인의 개혁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개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농자재인 농약도 농협 계통가격이 기본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인 개선 없이 보조금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니 정부와 농민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지난해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으로 비료, 전기, 기름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앞서 제도를 구체화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기존 무기질비료와 사료자금을 포함해 농가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농외소득 기준(3700만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 과장은 "법령 개정 사안인 만큼 농외소득 기준 상향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 직불금 지급할 때는 현재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을 만들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농지

"무늬만 농업인도 각종 혜택…기존 농업인 몫의 재원 분산시켜"

농지 300평 보유해도 자격 부여 소농직불금·농민수당 등 챙겨
농업인 정의 재정립할 필요성

농지은행 우선순위·금리 등 청년농에 집중된 농지 혜택 후계농 역차별 해결방안 주문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도 교육도 진행

농지 문제 역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임대차, 직불금, 농업인 정의 등의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다.

김상태 옥천군연합회장은 "농지 300평만 보유해도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상당한 병폐를 안고 있다"며 "농업이 생업의 일정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데, '무늬만 농업인'이 소농직불금과 농협 혜택을 받으며 기존 농업인 몫의 재원이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순모 대전광역시유성구연합회장도 "공무원 퇴직자들이 농지 300평을 구입해 농업인 자격을 얻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불금, 농민수당, 농협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질 농업인 여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만들든지, 농업인 정의를 다시 정립하든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양헌 동해시연합회장은 "경작 중인 5만평 가운데 임차농지 3만평은 지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많은 만큼 중앙부처 차원에서 관리 지침을 지자체에 명확히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 우선 배정에는 공감하지만 악용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청년농에 집중된 농지 정책 혜택으로 후계농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오우석 대전시연합회 사업부회장은 "농지은행 사업의 우선순위가 청창농, 2030세대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농지를 배정받고 농사를 짓지 않는 악용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작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후계농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혜택도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이 같은 조건이어서 후계농 자격 유지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다. 기존 일반농과 후계농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태준 농식품부 농지과 사무관은 “농지은행 농지 매입 예산을 청년농과 일반농(후계농)으로 분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며 “기존 농업인 주변에 나온 농지 매물의 경우에는 기존 농업인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고, 지난해 11월 해당 매물을 파악할 수 있는 ‘임대매물 알림서비스’를 도입한 상황으로 이를 잘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또 “현재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 40여건이 올라가 있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농업인 간 임대차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입법화되면 실경작자 중심의 임대차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도의 이해를 넓히는 교육도 진행됐다. 선거 일정은 2월 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최흥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조직의 숙원이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핵심 대안인 후계농육성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설계부터 지금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있게 매진해 얻어낸 값진 성과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농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CPTPP 재가입 논의, 기후위기 가속화, 농업·농촌 공동화 및 인구 감소 등 산적한 현안에 대응해 우리 농업인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연합회가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6.2.24.) 기사내용 인용

5 전략작물직불 예산 ‘두 배 확대’... 성장단계별 농지 매입·임대 지원

○ 2026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① 생산기반·인력 분야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 본격 추진된다.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책임 농정 실현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산기반 분야에서 농가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와 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농식품 수출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등 농식품 분야 주요 국정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조에서 올해 추진되는 주요 농식품 사업의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지침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농가소득·경영안정

수입안정보험 품목 15→20개

인구 감소 지역 10곳 기본소득

▲전략작물직불=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전략작물직불은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이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4196억원으로, 전년 2440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사전 격리하고 비상시 밥쌀용으로 전환하는 '수급조절용 벼'(2만ha)를 비롯해 수수·율무·메밀 등 신규 품목이 도입됐다. 기존 품목 중 조사료, 옥수수, 깨는 면적 확대 및 단가 인상이 이뤄졌다.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

동계작물	밀 100원/㎡, 그 외 작물 50원/㎡
하계작물	가루쌀·두류 200원/㎡, 하계조사료 550원/㎡, 옥수수·깨 150원/㎡, 수급조절용 벼 500원/㎡, 알팔파·율무 250원/㎡, 수수 240원/㎡

-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조사료(알팔파 포함)를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해 지급

대상 품목은 밀, 보리, 호밀, 귀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과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깨(참깨·들깨),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등 하계작물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이며, 지원요건은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농업인,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 등이다. 사업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동계작물은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수입안정보험=생산, 가격 변동,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이 크게 확대된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평년 수입 일정기준(최대 85%)를 보장한다.

올해 대상 품목이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예산도 2078억원에서 2752억원으로 증가됐다. 마늘·양파·가을감자·콩 등 14개 품목이 올해 본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6개 품목은 시범 운영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며,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지역농협 등에서 연중 가능하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한다.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70%를 지원한다. 농업경영주가 90일 미만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두 보험 모두 가입대상은 만 15세~87세까지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다. 보상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농업인안전보험에는 590억원, 농기계종합보험에는 360억원이 배정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 대상으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을 지급하며, 신안군과 영양군은 지자체(군) 예산을 더해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국비 예산은 2340억원이 배정됐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읍면에서 서류·현장 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로 결정이 된 경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지

매매 1㎡당 1만3000원까지 지원

생애 첫 농지 최대 30년 분할납부

▲맞춤형농지지원=맞춤형 농지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이 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해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농지 매입을 위한 융자, 농지 장기 임대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이고, 올해 햇빛소득마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협동조합도 신규 추가됐다.

지원 내용은 농지 매매, 생애첫농지취득지원, 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 선임대후매도, 교환·분합 등이다. 각각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경영규모에 따른 성장단계와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 한도가 다르다.

농지 매매의 경우 지원 한도는 논밭 모두 1만3000원/㎡이며, 대금 납부는 농가 선택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연령에 따라 최장 11~30년까지 원금균등분할 납부(연리 1%)이며,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농지 가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해야 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생애첫농지취득지원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55세 이하로, 지원 한도는 논밭 모두 3만8500원/㎡ 이내다. 농지대금은 연령에 따라 최장 11~30년까지 분할납부(원금균등분합 연리 1%)가 가능하다.

맞춤형 농지지원

전업농육성 대상자 순위	성장 단계	경영 규모	지원한도 (우대한도)			
			선임대 후매도	매매		임차·비축 농지임대
				농지 매매	생애첫농지 취득지원	
1.청년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자	진입	3ha이하	1.5ha	1.5ha	1.5ha	3ha(4ha)
2.2030세대	진입	3ha이하	1.5ha	1ha	1ha	3ha(4ha)
	성장	3ha초과	1.5ha	2.5ha	1.5ha	6ha(7ha)
3.후계농업경영인	진입	3ha이하	지원 불가	1ha	1ha	3ha(4ha)
	성장	3ha초과		2.5ha	1.5ha	6ha(7ha)
4.귀농인	진입	3ha이하		1ha	1ha	3ha(4ha)
	성장	3ha초과		2.5ha	1.5ha	6ha(7ha)
5.일반 농업인	진입	3ha이하		1ha	1ha	3ha(4ha)
	성장	3ha초과		2.5ha	1.5ha	6ha(7ha)

©한국농어민신문

선임대후매도는 39세 이하 청년농이 대상으로, 지원 한도는 1.5ha 이내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력이 없어야 하고, 임대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지원받은 농지에 임차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10~30년이며, 임대료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합의해 결정한다.

올해 융자 지원 예산은 1조8076억원으로, 지난해 1조1134억원보다 크게 확대된다. 사업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도 가능하고, 현장과 온라인 모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농기자재

산성토양 등 규산·석회비료 제공

농기계 임대 올해 예산 486억

▲토양개량제 지원=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과 화산회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과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업경영체가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3 FAX : 02-552-2814
남해화학㈜ · ㈜조비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 KG케미칼㈜

▲농기계 임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시군구 지자체이며, 내역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주산지일관기계화, 노후농기계대체 등 3개가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며, 주산지일관기계화는 경운·정지,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지원한다. 노후농기계대체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교체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은 486억원이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비·인건비 등 보조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업분야 근로 인력을 모집, 필요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형의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공법인, 이밖에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도시형의 경우는 농협중앙회(농촌지원부),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공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센터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와 인력운영비(교육비, 임차비,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다.

농촌형은 189개소 대상이며, 개소당 8000만원의 50%(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한다. 개소당 지원 금액은 전년도 운영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도시형은 1개소이며, 1억3000만원의 70%(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총 110개소로, 개소당 1억원의 5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되며 도입인원 규모와 전년도 운영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한국농어민신문(2026.2.24.) 보도자료 인용

6 “담합·독과점 엄정 대처”…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

- **17개 부처 참여... 상반기 집중 가동**
- **할인지원·할당관세·비축 방출실태 점검**
- **부정수급 시 즉시 수사의뢰...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민생물가를 특별 관리할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할당관세 등 정책지원을 부정 수급할 경우 즉시 수사에 의뢰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민생물가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7개 부처가 참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국민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가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TF를 운영해 민생품목의 물가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TF는 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먼저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공조해 엄정 대처한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비축물량 방출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의뢰한다.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통관,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와 협업한다. 이를 통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품목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면서 "물가 상승 근본 원인을 찾아 근원적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2026.2.11.) 보도자료 인용

7 농업AX플랫폼 주도할 민간사업자 공모

○ 4월 3일까지... 농민 지분 10% 이상

○ 정부는 5년간 1400억원 공공 출자

정부가 농업분야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일환으로 '국가 농업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주도할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정부는 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농업AX플랫폼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1~2세대 스마트농업을 넘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AI·데이터 기반 영농솔루션 플랫폼 구축 ▲초혁신 케이(K)-AI 스마트팜 고도화 등 두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사업 주체는 민·관 합작 SPC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공공 출자자로 참여한다. 출자금은 올해 7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400억원을 투입한다. 이로써 총 사업비는 29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분구조는 공공 49%, 민간 51%로, 민간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이 과반 이상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사업자는 4월3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공모 대상자는 농민, 농업법인, 농식품·유통기업,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부지 확보 등을 위해 지방정부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SPC가 농업회사법인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농민 또는 농업법인의 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민간 출자금이 80억원을 초과하면 농민·농업법인의 출자금은 최소 8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사업 범위는 재배업과 축산업 분야로 나뉜다. AI 데이터 솔루션과 온실·축사 등 AI 팜을 조성해 농가에 보급·확산하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정부는 4월 중 SPC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연내 SPC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반기 동안에는 사업 부지를 스마트농업 혁신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인·허가, 공유재산 관련 특례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APC 등 전후방산업과 정책 연계도 지원한다.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공모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기후 위기, 인력 부족과 같은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 AI를 적용해 AX플랫폼을 마련하겠다”며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스마트온실과 축사를 개발하고 수출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2026.2.4.) 보도자료 인용

8 농촌진흥청, ‘화학비료(무기질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지침’ 시행

○ 토양 유기물 기준 현실화·제주 토양 특성 반영해 별도 기준 신설

○ 올해 전국 9만 1,000 필지 대상 비료사용기준 준수 이행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 비료 적정 사용 컨설팅 사진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별도 기준(pH 5.0~8.5)을 신설했다.

제주 지역에서도 특이 특성을 보이는 토양통 3개(가파, 온평, 대흘)의 최근 3년간 산성도는 평균 7.9로 제주 일반 토양(5.8)보다 1.3배 높지만, 그동안 같은 기준(pH 5.0~7.5)이 적용됐다.

이번 별도 기준 마련으로 그동안 일반 토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가 토양 특성에 맞는 비료 사용과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지침을 토대로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2026년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을 신청한 경영체가 소유한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 농경지 9만 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양 산성도(pH),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등을 분석해 3개 항목 이상 기준에 적합하면 '적합' 그 외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027년 2차 점검에서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불금 10%가 감액된다.

아울러 2월 23일부터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공익직불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절차를 교육하고, 4~6월에는 지난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부적합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적정 사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고종민 식량산업기술팀장은 "공익직불제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농업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현실화에 노력하겠다."라며 "비료 적정 사용 유도, 탄소중립 농업 정책 뒷받침을 위해 이행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농기자재신문(2026.2.12.) 보도자료 인용

9 농어촌공사, 농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모집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기업의 제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동물용 의약품, 종자, 시설자재 등을 생산하는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으로, 1차 모집을 통해 약 10개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제품 설계와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비용과 함께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총 지원 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되며 회당 최대 2억원(지원 비율 50%)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제조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여 기업은 농식품부와 연계한 농산업 수출 활성화사업을 통해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 테스트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4월 9일 오후 5시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란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기술처장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 혁신을 통해 농산업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6.2.11.) 보도자료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생산·출하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생 산 량	2,039	1,750	1,723	984
출 하 량*	1,860	1,769	1,647	981

* 협회 회원사 기준, 출하량은 농업용과 수출용 합산임, 25년 하반기 통계 취합이 늦어져 25년 계 미수록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가격(달러) 및 환율

(단위 : $,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요 소	469	429	402	395	416	456
D A P	638	528	592	568	673	737
염화칼륨	533	346	330	310	316	364
환 율 (매매기준율)	1,295	1,317	1,350	1,377	1,427	1,417

※ 관세청 무역통계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6 이달의 주요 인사

❑ (전보)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에 방혜선**(2. 1일자)

○ (전) 김병석 국장 → (현) 방혜선 국장

❑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에 고병구**(2.1일자)

○ (전) 이상재 부장 → (현) 고병구 부장

7 회원사 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 ○ 제품명 : 명품쌀전용
- ○ 성분량 : 18-8-9+고토3+ 붕소0.5
- ○ 특성 및 효과
  - – 수확량 증대를 위한 고품질 미량요소(규산, 철, 아연, 망간 등 함유)
  - – 입자가 균일하고 먼지가 없어 막힘없는 측조시비/일반 시비 모두 가능
  - – 완효성 요소를 포함하여 가지거름(요소) 생략 가능

❑ ㈜세기

- ○ 제품명 : 원샷21
- ○ 성분량 : 21-7-7+고토2+붕소0.2+유황, 석회, 규산등
- ○ 특성 및 효과
  - – 원샷21비료는 저인산형태의 일반수도 및 간척지용 비료로서 양분공급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성 복합비료
  - – 입자가 균일하여 시비가 용이하며 지속적 양분용출로 가지거름 생략이 가능하므로 시비 노력비 절감과 수질 오염 예방에 효과적
  - – 다수확 재배에 적합한 3요소와 고토, 붕소, 유황, 석회, 규산 등의 미량요소가 풍부하여 고품질 생산에 매우 좋음
  - – 수도작 외에 과수, 과채류, 원예작물의 생리병예방과 맛, 당도, 때깔을 향상시킴

❑ (주)조비

○ 제품명 : 쎈칼NK
○ 성분량 : 14-0-18+15Cao(가용성 석회)
○ 특성 및 효과
- 쎈칼NK는 총질소의 99% 이상이 질산태질소로 작물의 흡수율이 높고 효과가 빠름
- 수용성 칼슘을 함유하여 칼슘비료를 추가로 시비하지 않아도 칼슘결핍증을 예방할 수 있음
- 질산태질소를 원료로 한 최고급 웃거름 비료로 암모니아 가스 피해가 없음
- 염소(Cl) 성분이 없어 토양에 안전하며 시설재배지에도 안심하고 사용
- 물에 잘 녹아 관주 및 모든작물의 웃거름용으로 사용

❑ KG케미칼(주)

○ 제품명 : 참세대22
○ 성분량 : 22-7-9+고토1+붕소0.2
○ 특성 및 효과
- 속효성과 지효성 원료가 적절히 조합되어 작물의 초기 생육 및 후기까지도 비효가 지속
- 강도를 강화하여 분진발생이 적어 측조시비(기계시비)시 편리함
- 인산흡수를 촉진시켜 이끼 발생을 방지

❑ (주)팜한농

❍ 제품명 : 광분해한번에측조스피드

❍ 성분량 : 32-7-7(질소, 인산, 칼리 모두 100% 코팅 완효성)

❍ 특성 및 효과

- 초기양분 용출속도가 빨라 조생종 및 이모작에 적합한 완효성비료
- 일반 완효성비료 대비 절반만 사용해도 동일 수확량 기대
- 100% 코팅이라 시비기 막힘 걱정이 없고 기계부식 막아 농기계 작업에 최적화된 비료
- 광분해 기술이 적용된 환경친화적 비료로 코팅 껍질 잔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비료 사용량이 절감되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탄소저감에도 기여
- 잡초와 조류(이끼)의 발생이 줄어들고 도복에도 강함

❑ ㈜풍농

❍ 제품명 : 올코팅한포로

❍ 성분량 : 32-6-8(100% 올코팅 측조시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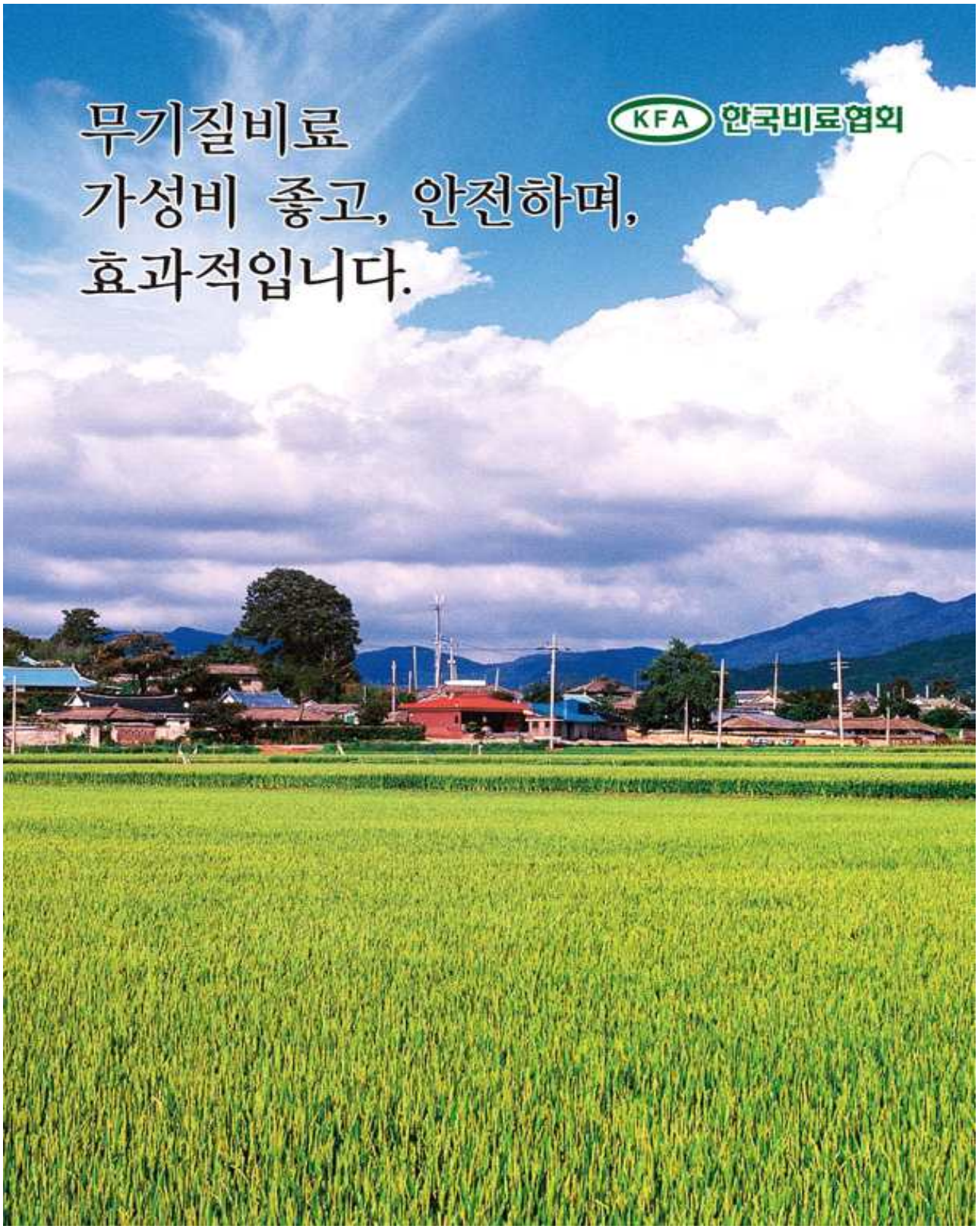
❍ 특성 및 효과

- 올코팅한포로 비료는 이앙시 밑거름 1회 시비로 전 생육기간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주는 올코팅 완효성비료
- 100% 올코팅으로 입자가 균일하고 매끈하며 단단한 경도로 제조되어 측조시비 등 기계시비시 막힘없이 작업성 뛰어남
- 완효성비료로 양분 유실이 없이 흡수효율이 높으며, 이끼, 괴불 발생을 경감, 벼초기 뿌리활착 및 유효분얼수 확보가 안정적
- 고농도 완효성비료로 시비량이 적어 시비노동력 줄어주는 경제적인 비료

❑ ㈜한국협화

○ 제품명 : 만세복합측조
○ 성분량 : 22-8-8+고토1+붕소0.1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함유로 기능강화 고농도 복합비료
- 입자 크기가 균일하고 매끈하여 측조시비에 적합
- 초기 생육에 효과적, 뿌리발육 촉진
- 수도작, 원예작물, 과수작물에 2포 시비(10a당)

※ 회원사 자료 인용



출처 : 농어촌공사 농촌경관사진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3 FAX : 02-552-2814
남해화학㈜ · ㈜조비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 KG케미칼㈜